

노동정책연구  
2022. 제22권 제2호 pp.97~125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2.004>

연구논문

##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최형재\*\*

본 연구는, 지역이동에 있어 주로 임금이나 소득 등 경제적 요인들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들과 달리, 대졸 청년층이 대학 소재지역으로부터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 등 비경제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졸업한 대졸자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 통계들과 연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졸자들 2명 중 1명꼴로 졸업 후 대학 소재지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노동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안전,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문화 여건들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문화 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생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여건들의 격차가 해소되거나 보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핵심용어 : 지역이동,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사회·문화 자본, 인적자본투자

논문접수일: 2022년 2월 16일, 심사의뢰일: 2022년 2월 18일, 심사완료일: 2022년 5월 19일

\* 본 논문은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윤윤규·최형재, 2020)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2022년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내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다.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hchoi5@korea.ac.kr)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연구결과가 축적된 분야이다. 그러나 지역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주된 초점은 많은 경우 경제적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지역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비경제적 여건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순히 일자리가 지닌 경제적 특성들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물론 경제적 요인들이 일자리 선택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작동할지라도, 청년층 근로자들은 경제적 요인들 이외에도 자신들의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건을 갖춘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탐색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의 종합적인 ‘질’을 판단할 때 경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들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이동까지 시도하는 개인들이 사회·문화 요인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려는 기업 및 지방정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중앙정부 모두에게 전략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동시장의 기업과 근로자가 매칭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일자리 특성의 조합은 기업의 생산기술과 비용 구조, 그리고 근로자의 선호가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최적인 상태, 즉, 기업의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선호구조를 지닌 근로자와 매칭이 되며, 일자리마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자들이 일자리 선택과정에서 고려하는 일자리 특성들에는 일자리 자체가 제시하는 임금, 복리후생, 근로의 강도 등 특성 이외에 그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이 제공하는 혜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의 정주 요건이나 사회·문화적 수준, 교육환경과 같은 특성들은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직접적인 일

자리 특성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역이동을 연구할 때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이로 인한 지방에서의 인재유출 및 지방소재 기업들의 구인난 현상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김기승 외, 2012; 류장수, 2015; 이규용, 2018; 이상욱 외, 2019).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력유출 현상이 해소되려면 근본적으로는 지방에서 소위 질 좋은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되어야 하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적절한 임금과 근로환경을 제공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인력 공급의 ‘풍요’ 속에서 기업들의 인력 ‘빈곤’이 병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남기찬 외, 2020; 최광성 외, 2018). 그러나 지방소재 기업들이 임금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높여준다고 해서 과연 청년층이 해당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 기업들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들이 존재하는데도 수도권으로의 인력 집중이 지속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청년층의 지역(지방)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지역이동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청년층 지역이동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비경제적 특성들이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 논의에 추가로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 및 기존연구

인구 또는 노동의 지역이동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 경제학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지역을 선택할 때 선택 가능한 각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가치화된 편익(benefits)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현재가치화된 비용(costs)을 비교하여 편익과 비용의 편차가 가장 큰, 즉 순 편익(net benefits)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편익과 비용에는 Hicks(1932)나 Sjaastad(1962)가 주장한 경제적 측면, 즉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과 비용까지도 포함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이동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Harris and Todaro(1970)의 연구도 인적자본투자이론의 맥락에서 두 지역에서 (실업확률까지 고려한) 기대임금의 차이를 주된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의 지역이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들도 국가 간 인구이동 현상이든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 간 이동이든 이러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되고 실증적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경제적인 요인을 활용하여 그 이론을 검증하여 왔다(Naskoteen and Zimmer, 1980; 김리영·양광식, 2013; 이현재, 2014).<sup>1)</sup>

인구학, 도시학 또는 도시 지리학 분야에서는 중력이론(gravity theory)을 통해 지역 간 이동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이 각 지역의 물적 규모(stock 또는 mass)에 비례하고 지역 간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Stewart, 1950; Anderson, 2011). 여기서 물적 규모에는 인구의 규모, GDP 등과 같은 요인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이 양호한 큰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크기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력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내용상으로 볼 때 인적자본이론과 배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물적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리가 멀수록 이동에 따른 비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현황과 패턴에 대한 분석, 지역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이동이 노동시장 성과(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지역이동의 현황과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기타지역 간 인구 유출입 통계를 통해 그

1) 인적자본투자이론에 기반한 지역이동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Greenwood(1997)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권상철, 2005; 최성호·이창무, 2013; 이현재, 2014; 강동우, 2016; 최석현 외, 2016; 문남철,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20). 부산이나 울산, 광주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분석한 대다수 논문에서도 지역의 인구이동이 청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 이동대상 지역이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김기승 외, 2012; 김용현, 2012; 류장수, 2015; 이찬영·문제철, 2016; 홍성우, 2016; 이상욱 외, 2019).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역에서의 인재유출이 지역 산업발전 및 고용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인재유출 억제에 위한 다양한 산업 및 고용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이규용, 2018; 박종훈·이경재, 2018).

개인들이 지역을 이동하게 하는 결정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누가 지역이동 경향이 높은지, 즉 지역이동이 어떠한 인적속성 그룹에서 강하게 나타나는지와, 지역의 어떠한 특성들이 지역이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먼저 인적속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일수록 지역이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호, 2010; 강동우, 2016; 이상욱 외, 2019). 지역이동 결정요인 관련 기존연구에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된 부분은 지역이동을 촉발하는 지역의 특성들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Harris and Todaro(1970)의 가설에 기반을 둔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지역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Schwarz, 1973; Naskoteen and Zimmer, 1980; 박추환·김명수, 2006; 이현재, 2014; 홍성호·유수영, 2012; 이찬영·이홍후, 2016; 문남철, 2019).

일부 연구들에서는 지역이동에 있어 비경제적 특성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의 지역이동을 분석한 이상욱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쇼핑시설이 밀집되고 초등교육여건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김리영·양광식(2013), 이찬영·문제철(2016)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업체 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문화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주택

가격, 재정자립도 등의 수준이 인구 유출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개 시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유경문(1991)의 연구는, 1966~198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이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임금이나 취업기회 등의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육기회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성우(2001)에서도 역시 1990년대 중반에 지역의 행정적, 사회적 요인들이 인구이동에 유의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동 관련 또 다른 연구는 지역이동에 관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시사점처럼 과연 지역이동으로 인해 노동시장 성과가 제고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이동의 성과를 분석한 이상호(2010)의 연구는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실질임금이 6~7%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광성 외(2018)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2010년 졸업생 표본을 대상으로 대졸자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할 때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중차분매칭법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직장을 이진한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상승 효과가 발견되었다. 조동훈(2020)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2016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이동(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의 임금수준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지역이동이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효과는 고등학교-대학교-취업경로의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 Ⅲ. 분석방법 및 자료

#### 1. 지역이동 결정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의 졸업 후 출신학교 소재지로부터 이동을 통해 지역이동(보다 정확하게는 지역이탈) 현상을 분석하며, 이러한 지역이동에 있어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졸업 후 출신학교 소재지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아 개인의 인적속성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본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한다. 회귀모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1 + X_i^R \beta'_S + X_i^I \beta'_I + e_i \quad (1)$$

여기서 종속변수  $y$ 는 졸업 후 출신학교(대학) 소재지(광역시도 구분)로부터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며, 1) 추적조사 시점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첫 일자리(일자리(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음) 소재지역이 출신대학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2) 현 일자리가 졸업 후 첫 일자리이며 현재 일자리 지역이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3) 일자리 경험이 없는 형태로 현재 거주지가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X^R$ 은 출신학교 소재지의 다양한 사회·문화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이고,  $X^I$ 는 개인의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이다. 본 장의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지역으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있어 유출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설명변수들인  $X^R$ 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은 다양한 세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또한, 자의적으로 일부 사회·문화 지표들만을 선택하는 것도 실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 지표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이들 사회·문화 지표들이 청년층의 지역이탈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e-지방지표’에서는 주제별로 지역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야 중 교육,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안전, 환경 및 사회통합 분야를 주요한 사회·문화 관련 분야로 간주하여 분야별로 제공되는 세부 지표들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지역의 세부 사회·문화 지표들이 대졸 졸업자들의 지역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소비 분야에서는 1인당 지역총소득,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을,

고용여건 분야에서는 천 명당 사업체 수, 천 명당 종사자 수 등의 양적 지표와 비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등 질적 지표를 활용하였다.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는 천 명당 공원 면적, 주택보급률, 교통문화지수, 주차장확보율 등을 대표적인 세부 지표로 고려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수,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자사고/특목고 수, 대학 수 등을 이용하였다. 문화와 여가 분야에서는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십만 명당 체육시설 수를 대표적인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천 명당 병상 수 및 천 명당 의사 수 등 보건환경 지표와 119센터 1개당 주민 수, 경찰 1명당 주민 수, 구조대원 1명 당 주민 수, 천 명당 범죄 건수, 아동 십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건수 등의 안전환경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통계포털에서는 안전환경의 내용별(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관련, 감염병 관련 등)로 지역별 등급을 매겨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안전환경 등급 통계를 별도로 활용하여 안전환경이 대졸자의 지역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에 있어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식 (1) 회귀식 모형에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들인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환경 관련 변수들이 과연 외생적(exogenous)인지이다. 만약 이들 지역변수들이 내생적(endogenous)이라면, 즉  $Cov(X^R, e) \neq 0$ 이라면 통상적인 방식으로 추정 한 계수들의 추정량에는 편의가 생기게 될 것이다. 개인들은 거주지역이나 학교(와 학교의 소재지) 선택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식 (1)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지역 및 학교 선택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선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변수들은 더 이상 외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먼저, 개인들의 능력이나 성취동기 등 비관측 요소들이 지역선택 또는 이동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능성은 ‘부모의 효과’로서, 부모들이 대입과 취업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의 학업에 유별나게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능력과 관심이 뛰어난 소위 ‘맹자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가 어려서부터 거주지역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자녀의 대학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일종의 ‘고향효과’ 또는 ‘삶의 터전효과’로서, 다



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대학의 선택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향의 효과’가 개인들의 능력과 연계된다면 지역변수의 내생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변수들이 가지게 될 내생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단에서 열거했던 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들을 찾아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들의 능력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학점평균’(4.0 만점으로 환산)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다. 한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각각의 교육 수준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향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학했던 대학의 소재지가 고등학교 때의 거주지와 같은지 여부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리변수들(아래 식의  $X^P$ 로 표현)을 활용한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1 + X_i^R \beta'_S + X_i^I \beta'_I + X_i^P \beta'_P + e_i \quad (2)$$

또 한 가지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는 0과 1로 구성된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분석모형은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 모형이지만, 추정과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형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실 한계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형확률 모형이나 프로빗 또는 로짓 모형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선형확률 모형은 잔차항의 이분산(heteroscedasticity) 문제가 내재적이므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다.

## 2. 분석자료 및 기간

지역의 사회·문화 자본이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으로 파악된 사회·문화 자본에 대한 통계와 청년 개인들의 지역 정주 또는 이동에 관한 미시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개별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지역이동 정보를, 통계청(kosis.kr)에서 보고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통계자료(특

히 사회문화 통계들)와 결합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문대,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 등 모든 유형의 대학 졸업자들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졸업생들이다. GOMS 조사는 200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추적조사(졸업 후 3년 동안 매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최근인 2017년 졸업생까지 매년(2006년 졸업생 제외) 졸업생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에 활용되는 GOMS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졸업자 표본부터 가장 최근 표본인 2017년 졸업자 표본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생 중에는 소위 ‘늦깎이 대학생’으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뒤늦게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청년 대학생’들과는 학업의 목적이나 지역이동 등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동질성을 위해 연령을 20~29세로 한정하였다.<sup>2)</sup>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의 범위는 서울시와 광역시도라는 행정구역상의 지역을 의미한다.<sup>3)</sup> 개인들은 여러 목적으로 지역이동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 개인이 지역이동을 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관찰기간(즉, 졸업 후 1년 반~2년) 동안 일자리를 가졌던 경험이 있고, 첫 일자리 소재지역이 출신대학 소재지와 다를 경우에 지역이동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일자리를 가졌던 경험이 없지만, 현재 주거지가 출신대학 소재지와 다를 경우에도 지역이동을 하였다고 간주한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동’과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동은 그 패턴과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일자리 취업일지라도 상용직인 경우와 파트타임 혹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지역이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최광성 외, 2018),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이외에 취업자,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제외 취업자, 미취업자 등으로 표본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2) 이렇게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전체 GOMS 표본의 90%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3) 청년층의 지역이동 중 상당수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이동’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구역상의 지역 구분보다는 윤윤규 외(2010), 고영우 외(2020)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노동시장권’을 지역의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 지역노동시장권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점과 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통계가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광역시도)상으로 구분된 지역의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분석하고자 한다.

### 3. 표본의 기초통계

GOMS의 2007~2017년 졸업생 조사자료 중 졸업 당시 나이가 20~29세까지 인 표본을 추출한 후 실증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에 있어 결측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최종 관측치 수는 178,894명이며, 이들 표본의 기초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의 신규 대졸자 표본 중 남성의 비중은 48.0%로 여성보다 약간 낮았으며, 졸업 시점에서의 연령은 약 25.6세이고, 전체 표본 중 3.7%가 혼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분포는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이 전체의 63.3%, 전문대 졸업생이 35.6%로 이들 두 집단이 전체 표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립 유형의 분포를 보면 사립대학 졸업생이 전체의 82.5%로서 국·공립대학 졸업생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다. 표본의 전공계열별 구성을 보면 사회계열이 26.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공학 계열이 24.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전체 분석표본(표본 수=178,894)의 주요 인적속성 및 재학 중 학교특성  
(횡단면 가중치 적용)

	평균	표준편차
남자	0.480	
연령	25.586	2.031
혼인 여부	0.037	
전문대	0.356	
4년제 일반대학	0.633	
교육대학	0.011	
사립	0.825	
인문계열	0.096	
사회계열	0.265	
사범계열	0.063	
공학계열	0.245	
자연계열	0.108	
의약계열	0.090	
예체능계열	0.134	

자료: 2007~2017년 졸업생 대상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표본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대학 졸업자 지역이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나누어 지역이동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이동자, 즉 재학했던 학교의 소재지를 떠난 졸업생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9%로 대졸 청년층에게 있어 지역이동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경제활동 상태별로 지역이동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노동이동)이 정주를 위한 지역이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취업자들(<표 2>의 취업자) 중 지역이동자의 비중은 51.6%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주를 목적으로 지역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한 미취업자들 중에서는 지역이동자의 비율이 45.8% 수준이다.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상용직으로 한정할 경우, 지역이동자의 비율은 49.6%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그 수치가 다소 낮아진다. 이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이 상용직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표본의 경제활동 상태별 지역이동 확률

(단위: 명, %)

	전체		취업자*		상용직**		미취업자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비이동	87,909	49.1	74,686	48.4	15,677	50.4	13,333	54.2
이동	90,985	50.9	79,602	51.6	15,427	49.6	11,273	45.8
전체	178,894	100.0	154,288	100.0	31,104	100.0	24,606	100.0

주: 횡단면 가중치 사용. \*는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자이며, \*\*는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종일 일하는 일반직장 취업자’를 의미.

#### IV. 대졸자들의 지역이탈에 있어 사회·문화 자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 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표 3>은 인적 속성, 전공 및 졸업 연도, 졸업당시 학교 소재지역의 기본적인

경제지표들, 그리고 개인과 부모의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 및 학교 소재지가 고등학교 때의 거주지와 같은지 여부 등의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한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모형 추정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지역이탈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며, 그 차이는 특별히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거나 취업자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각 변수들의 추정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추정치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결과가 취업자 표본의 추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자가 전체 표본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취업자 표본을 중심으로 유의한 추정결과를 설명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4.3%p 지역이탈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이동 확률은 미세하게 낮아진다.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과 교육대학 출신의 지역이동 확률은 각각 3.7%p, 2.2%p 만큼 높다. 사립대학 출신은 국·공립대학 출신에 비해 지역이동 확률이 3.6%p 높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 비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순으로 졸업 후 지역이동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재학 때의 학점평균이 높을수록 지역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공학, 의약 및 예체능 계열 출신들의 전공 특성상 지역이동에 따른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지역이동 확률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소재지가 고등학교 때 거주지에 있느냐의 여부도 지역이동 확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구체적으로, 재학했던 대학이 고등학교 때 거주했던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대학 소재지를 이탈할 확률이 약 40%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직 취업자로 한정해도 질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 추정치의 크기는 유의할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이동에 관한 결정이 고용형태 간(즉, 상용직 vs. 단시간 근로자)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미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전 결과와는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예를 들

어, 미취업자들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역이탈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이탈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자들에게서는 전문대 졸업생보다는 4년제 일반대학 출신의 지역이동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열별로도 취업자 그룹과는 달리 인문계열에 비해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의 지역이동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들과 달리 미취업자들에게서는 학점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지역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그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론적 예측이나 직관과 부합하게 1인당 지역총소득이 높은 지역의 대학 출신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의외의 결과는 출신대학 소재지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지역이탈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청년실업률의 추정치는 예측과 부합하게 청년층의 출신학교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높을수록 지역을 이탈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표준화된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률과 1인당 지역총소득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집단에서는 지역총소득의 효과가 청년실업률의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미취업자들에서는 반대로 청년실업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들의 경우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잠재소득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미취업자들은 향후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상황이 지역이동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대학 졸업자의 출신학교 소재지역 이탈에 대한 선형 확률모형의 추정결과

	전체 표본		취업자		파트타임 제외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p 값)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된 추정치
남성	0.026*** (0.000)		0.043*** (0.000)		0.012* (0.084)		-0.047*** (0.000)	
연령	0.001 (0.136)		-0.003*** (0.001)		0.002 (0.209)		0.015*** (0.000)	
교육대학	0.020** (0.039)		0.022** (0.031)		0.088*** (0.002)		0.002 (0.953)	

<표 3>의 계속

	전체 표본		취업자		파트타임 제외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p값)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p값)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p값)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p값)	표준화된 추정치
4년제 일반대학	0.020*** (0.000)		0.037*** (0.000)		0.003 (0.633)		-0.061*** (0.000)	
사립	0.052*** (0.000)		0.036*** (0.000)		0.071*** (0.000)		0.096*** (0.000)	
사회계열	0.016*** (0.000)		0.016*** (0.000)		0.009 (0.275)		0.012 (0.211)	
교육계열	-0.007 (0.212)		-0.013** (0.027)		-0.009 (0.435)		0.029** (0.023)	
공학계열	0.068*** (0.000)		0.082*** (0.000)		0.060*** (0.000)		-0.019** (0.045)	
자연계열	0.019*** (0.000)		0.030*** (0.000)		0.022** (0.024)		-0.012 (0.214)	
의약계열	0.040*** (0.000)		0.048*** (0.000)		0.024* (0.068)		-0.038** (0.028)	
예체능계열	0.062*** (0.000)		0.064*** (0.000)		0.061*** (0.000)		0.036*** (0.002)	
학점평균(4.0만점)	0.004** (0.030)		0.005** (0.019)		-0.004 (0.428)		0.003 (0.461)	
부의 교육수준: 고졸	0.009* (0.085)		0.009* (0.096)		-0.008 (0.561)		0.016 (0.219)	
부의 교육수준: 대졸+	0.004 (0.136)		0.006* (0.065)		0.000 (0.953)		0.008 (0.274)	
모의 교육수준: 고졸	-0.005 (0.383)		-0.006 (0.343)		0.001 (0.948)		0.003 (0.839)	
모의 교육수준: 대졸+	-0.007** (0.034)		-0.006 (0.108)		-0.004 (0.637)		0.000 (0.975)	
고교-대학 소재지 일치 여부	-0.398*** (0.000)		-0.383*** (0.000)		-0.425*** (0.000)		-0.497*** (0.000)	
1인당 지역총소득	-0.189*** (0.000)	-0.098	-0.208*** (0.000)	-0.108	-0.194*** (0.000)	-0.108	-0.065*** (0.000)	-0.035
실업률	-0.098*** (0.000)	-0.159	-0.094*** (0.000)	-0.151	-0.103*** (0.000)	-0.168	-0.119*** (0.000)	-0.195
청년실업률	0.023*** (0.000)	0.069	0.023*** (0.000)	0.069	0.013*** (0.000)	0.038	0.023*** (0.000)	0.068
표본 수	178,894		154,288		31,104		24,606	
R2	0.189		0.181		0.227		0.285	

주: ( )안은 p-value.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졸업연도 코호트 더미변수 및 상수항의 추정치는 보고를 생략.

## 2. 고용·사회·문화 여건의 효과

<표 3>의 모형에 지역의 세부적인 고용·사회·문화 여건 변수들을 추가해 가며 각 고용·사회·문화 여건 변수들이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표 4>의 결과와 같다. 이 표의 결과는 지면상 인적 속성이나 전공계열 등 <표 3>에서 제시된 기본 설명변수들의 추정치 보고는 생략하고 관심 대상인 고용·사회·문화 여건 변수들의 추정치들만을 제시한 것이다.

### 가. 고용여건의 효과

먼저 양적인 고용여건의 효과를 보면 학교 소재지의 사업체 수가 많거나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즉, 고용여건이 양호할수록 지역이동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천 명당 사업체 수가 1개 늘어날수록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역을 이탈할 확률은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 명당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할수록 지역이탈 확률은 0.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있어 지역의 고용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론 및 직관, 그리고 기존연구(이찬영, 2015)의 분석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고용의 질적 여건들의 효과는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이론 및 직관과 부합하게 평균 월 임금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들은 졸업 후 해당 지역을 떠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비중과 지역이동 확률 간에는 직관과는 달리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중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파악은 쉽지 않지만, 아마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체 일자리의 양, 즉 취업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여건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먼저, 표준화 추정치로 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용의 양적 지표들이 고용의 질적 지표들에 비해 지역이동 확률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즉, 대졸 청년층은 지역선택에 있어 그만큼 취업기회를 (일자리의 질에 비해)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결과는, 고용여건의 효과가 미취



업자들에 비해 취업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노동이동을 도모하는 취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 나. 생활 및 주거여건의 효과

기본모형에 생활 및 주거여건 변수들을 각각 서로 다른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표 4>의 생활·주거 분야),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교통문화지수가 높을수록<sup>4)</sup>,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이 높을수록 지역이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sup>5)</sup> 주택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지역이탈 확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지역이탈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교통문화지수와 주차장 확보율의 효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본격적인 사회진출 초년생인 신규 대졸자들 중 일부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차량을 구입·운전하게 되는 ‘초보 운전자’가 되는데, 이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행태나 교통안전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문화 수준과 차량 주차공간 확보의 수월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 도로여건이나 신호등 체계 등 보행자의 안전보행과 교통규칙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주차장 확보율 등은 도시화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수준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은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sup>7)</sup>

주택보급율의 효과는 이전 연구들(김리영·양광식, 2013; 이찬영·문제철, 2016)의 결과와 다소 부합하지 않은데, 이 역시 도시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주택보급률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광역시도 등 인구밀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sup>8)</sup>, 이들 대도시 지역에는 일자리와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4)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보행자 등의 습관 및 행동 양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조사·분석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

5) 주차장의 수를 자동차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

6)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을 의미.

7) 2017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도의 교통문화지수 평균은 82.2점, 나머지 시도의 평균은 81.4점.

8) 2017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도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102.8점, 나머지 시도의 평균은 108.8점.

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소재 대학의 졸업자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을 떠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주거 환경의 대리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 ‘천 명당 공원면적’의 효과는 흥미롭게도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에게서는 단위 인구 수 대비 공원 면적이 커질수록 해당 지역을 떠날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취업자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미취업자들에 대한 효과는, 미취업자들의 경우 지역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을 중요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유한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직관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취업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 이유는, 이들이 지역이동에 있어 ‘노동이동’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생활의 쾌적함 같은 정주여건보다는 취업기회 측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다. 교육여건의 효과

교육여건 역시 대졸 청년층의 졸업 후 지역이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경제활동 상태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났다(<표 4>의 교육 분야). 구체적으로,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가 많아질수록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여건과 지역이탈 간 음(-)의 관계는 김현아(2008), 유경문(1991) 등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다만, 유치원 수와 대학 수가 많을수록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한 가지 추론을 한다면, 유치원이나 대학 등 비영리 교육기관들(예를 들어 대학교 지방 분교나 이원화 캠퍼스)의 설립 등이 과거에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여건 분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이다. 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크기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부 교육여건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다른 요소들보다도 자사고/특목고 수의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점이다. 취업자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예로 들면, 자사고/특목고 수의 표준화 계수 추

정치는 다른 세부 교육여건 지표들에 비해 4~8배 정도 크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를 약간 달리 하지만 미취업자 표본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거주지역 선택에 있어 자사고/특목고와 같은 명목적인 성과가 우수한 고등학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애사에 있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부모’가 될 대졸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의 지역이동에 있어 이러한 교육여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자사고/특목고 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라. 문화 및 스포츠 기반 여건의 효과

실증분석 결과, 문화나 스포츠 기반 여건들도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문화·스포츠 분야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 기반시설 또는 체육시설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리영·양광식(2013), 이찬영·문제철(2016) 등의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문화 및 스포츠 기반시설의 효과는 대졸자들의 경제활동 상태와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문화 및 스포츠 여건의 영향은 이전의 고용여건이나 생활여건, 또는 교육여건에 비해 효과의 크기(표준화 계수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작다.

#### 마. 보건환경의 효과

한편, 지역의 의료 및 보건환경 수준 역시 예측과 부합하게 대졸자들의 졸업 후 대학 소재지역 이탈과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들과 미취업자들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학 중 대학 소재지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대졸자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0.8%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학 중 대학 소재지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명 증가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대학 소재지를 이탈할 확률이

14.4%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의 보건환경 분야 결과). 이러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역이동에 대한 영향은 김리영·양광식(2013), 이찬영·문제철(2016)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의사 수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청년층이 지역선택이나 지역이동 결정에서 지역의 의료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바. 안전환경의 효과

재학했던 대학 소재지의 안전환경 수준 역시 대졸 청년층의 대학 소재지 이탈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의 안전환경 분야 결과). 안전환경 수준의 효과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게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안전환경 수준의 효과는 세부 지표들마다 다소 엇갈리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의 수, 구조대원 1명당 담당 주민의 수, 아동 십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건수 등의 세부 지표들은 대졸자들의 대학 소재지역 이탈 확률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119 센터 1개 센터당 담당 주민 수, 천 명당 범죄 건수 등은 지역이탈 확률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안전환경 수준을 등급으로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관련 안전등급이 높아질수록(즉, 안전도가 열악해질수록) 지역이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범죄나 자살, 또는 감염병 관련 안전등급의 영향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청년층은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환경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러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범죄, 자살, 감염병 등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안전환경 수준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해당 지역이 취업여건이나 다른 문화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경우 지역을 이탈하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9) 지역안전등급은 재난, 사고, 질병관리 등의 분야별로 산출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상대등급을 부여한 것이며, 가장 안전한 1등급부터 가장 안전도가 낮은 5등급까지로 분류(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사. 사회복지/사회통합의 효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회통합 관련 여건들이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표 4>의 사회통합 분야 결과), 직관과 부합하게,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대학 출신일 경우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0)</sup>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나 미취업자들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사회통합 분야 세부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크기)도 대체로 고용이나 생활·주거 분야 세부 요인들만큼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고용·사회·문화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분야	세부 요인	전체		전체 취업자		상용직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고용	천 명당 사업체 수	-0.010*** (0.000)	-0.155	-0.011*** (0.000)	-0.165	-0.011*** (0.000)	-0.168	-0.006*** (0.000)	-0.086
	천 명당 종사자 수	-0.003*** (0.000)	-0.290	-0.003*** (0.000)	-0.303	-0.003*** (0.000)	-0.306	-0.002*** (0.000)	-0.186
	비정규직 비중	-0.007*** (0.000)	-0.052	-0.007*** (0.000)	-0.051	-0.008*** (0.000)	-0.061	-0.007*** (0.000)	-0.058
	로그 평균 월 임금	-0.543*** (0.000)	-0.120	-0.518*** (0.000)	-0.114	-0.234* (0.058)	-0.051	-0.615*** (0.000)	-0.138
생활· 주거	천 명당 공원면적	0.002*** (0.000)	0.016	0.003*** (0.000)	0.021	0.001* (0.089)	0.009	-0.002** (0.022)	-0.014
	주택보급률	0.013*** (0.000)	0.140	0.014*** (0.000)	0.146	0.014*** (0.000)	0.146	0.009*** (0.000)	0.095
	교통문화지수	-0.009*** (0.000)	-0.066	-0.008*** (0.000)	-0.063	-0.013*** (0.000)	-0.096	-0.010*** (0.000)	-0.073
	주차장 확보율	-0.005*** (0.000)	-0.197	-0.005*** (0.000)	-0.198	-0.006*** (0.000)	-0.209	-0.004*** (0.000)	-0.172

10) 삶의 만족도 지표는 통계청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의 13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표 4〉의 계속

분야	세부 요인	전체		전체 취업자		상용직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교육	유치원 수	0.000*** (0.000)	0.077	0.000*** (0.000)	0.081	0.000*** (0.000)	0.096	0.000*** (0.000)	0.051
	천 명당 사설학원 수	-0.135*** (0.000)	-0.067	-0.135*** (0.000)	-0.067	-0.152*** (0.000)	-0.073	-0.113*** (0.000)	-0.058
	자사고/특목고 수	-0.007*** (0.000)	-0.268	-0.007*** (0.000)	-0.283	-0.008*** (0.000)	-0.298	-0.004*** (0.000)	-0.148
	대학 수	0.001*** (0.000)	0.041	0.001*** (0.000)	0.044	0.002*** (0.000)	0.066	0.001*** (0.000)	0.027
문화·스포츠	문화기반시설 수 <sup>1)</sup>	-0.003*** (0.000)	-0.015	-0.004*** (0.000)	-0.021	-0.005*** (0.001)	-0.026	0.001 (0.361)	0.008
	체육시설 수 <sup>1)</sup>	-0.001*** (0.000)	-0.017	-0.001*** (0.000)	-0.014	-0.001*** (0.002)	-0.023	-0.002*** (0.000)	-0.041
보건 환경	천 명당 병상 수	-0.008*** (0.000)	-0.063	-0.008*** (0.000)	-0.064	-0.013*** (0.000)	-0.098	-0.005*** (0.000)	-0.044
	천 명당 의사 수	-0.144*** (0.000)	-0.202	-0.151*** (0.000)	-0.211	-0.172*** (0.000)	-0.232	-0.094*** (0.000)	-0.136
안전 환경	119센터 1개당 주민 수	-0.000*** (0.000)	-0.161	-0.000*** (0.000)	-0.161	-0.000*** (0.000)	-0.183	-0.000*** (0.000)	-0.144
	경찰 1명당 주민 수	0.001*** (0.000)	0.123	0.001*** (0.000)	0.129	0.001*** (0.000)	0.129	0.000*** (0.000)	0.078
	구조대원 1명당 주민 수	0.000*** (0.000)	0.038	0.000*** (0.000)	0.044	0.000*** (0.000)	0.075	0.000 (0.888)	0.001
	천 명당 범죄 건수	-0.010*** (0.000)	-0.079	-0.011*** (0.000)	-0.086	-0.008*** (0.000)	-0.063	-0.004*** (0.000)	-0.034
	아동 안전사고 사망 건수 <sup>1)</sup>	0.009*** (0.000)	0.036	0.009*** (0.000)	0.033	0.003 (0.219)	0.013	0.013*** (0.000)	0.051
	교통사고 안전등급	0.026*** (0.000)	0.064	0.027*** (0.000)	0.066	0.001 (0.888)	0.002	0.020*** (0.000)	0.050
	화재 안전등급	0.012*** (0.000)	0.026	0.014*** (0.000)	0.031	0.012** (0.026)	0.026	-0.005 (0.379)	-0.011
	범죄 안전등급	-0.061*** (0.000)	-0.128	-0.065*** (0.000)	-0.135	-0.051*** (0.000)	-0.107	-0.034*** (0.000)	-0.073
	생활안전 안전등급	0.028*** (0.000)	0.067	0.031*** (0.000)	0.074	0.032*** (0.000)	0.075	0.012** (0.011)	0.031
	자살 관련 안전등급	-0.035*** (0.000)	-0.078	-0.037*** (0.000)	-0.082	-0.037*** (0.000)	-0.084	-0.022*** (0.000)	-0.048
감염병 관련 안전등급	-0.012*** (0.000)	-0.030	-0.014*** (0.000)	-0.034	-0.018*** (0.000)	-0.045	-0.002 (0.756)	-0.004	

〈표 4〉의 계속

분야	세부 요인	전체		전체 취업자		상용직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사회 통합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8*** (0.000)	-0.119	-0.008*** (0.000)	-0.123	-0.012*** (0.000)	-0.182	-0.005*** (0.000)	-0.081
	삶의 만족도	-0.009*** (0.000)	-0.128	-0.009*** (0.000)	-0.127	-0.006*** (0.000)	-0.083	-0.008*** (0.000)	-0.119

주: 1)은 십만 명당 통계. ( ) 안은 p-value.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기타 변수들의 추정치는 보고를 생략.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지역이동, 특히 대졸자들(전문대,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 포함)의 졸업 후 대학 소재지로부터의 이탈 현상을 분석하며, 이러한 이동에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이동에 있어 기존연구와 달리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 자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이며, 여기에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e-지방지표에서 제공되고 있는 풍부한 지역(광역시도 기준) 사회·문화 통계들을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관련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졸자들 가운데 졸업 후 대학 소재지역을 이탈하는 비중은 평균 50% 수준으로, 대졸자들의 지역이탈이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두 집단 간 지역이탈 확률 추세가 상반되게 나타나면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지역특성의 효과 중 먼저 지역의 거시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지표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이론적 예측이나 직관과 부합하게 대학 소재

지역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학 소재지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기회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여건들도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적 지표들은 다소 혼재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표준화 계수 추정치로 살펴보면 고용의 질적 지표들보다는 고용의 양적 지표들이 지역이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 요인들 역시 많은 범주에서 직관과 부합하게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대학 소재지의 교통문화 지수나 주차장확보율 등 교통 관련 문화와 수준이 양호할수록, 사설학원 수나 자사고·특목고의 수가 많아 교육여건이 양호할수록, 천 명당 의사 수 등 보건의료 기반이 좋을수록, 경찰 1명당 주민 수가 적거나 기타 생활안전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일부 사회·문화 범주 내에서도 세부 지표들 간에 서로 엇갈리는 결과가 일부 도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 부문에서 사설학원 수나 자사고·특목고의 수가 많은 지역의 대학 출신 졸업자일수록 졸업 후 해당 소재지를 이탈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치원 수나 대학 수의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도 생활안전 범주에서는 안전도가 양호한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자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반면, 자살이나 범죄 등의 범주에서는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분석결과는 졸업한 대학 소재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 특히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여건들이 양호할수록 청년층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영역 또는 분야 내에서도 세부 지표들 간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크기)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용, 생활 및 주거, 교육, 보건환경, 사회통합 분야의 요인들이 문화 및 스포츠, 안전환경 분야의 요인들보다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들 중에서는 고용여건 중 천 명당 종사자 수, 교육여건 중 자사고/특목고의 수, 보



건환경 분야의 천 명당 의사 수 등의 순으로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의 효과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자들이 취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 및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상대적으로 더 신중하게 고려하였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경제적·노동시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여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수준, 의료수준, 안전상황 등 다양한 사회·문화여건들도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청년층의 유입과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 여건들을 잘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특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해당 일자리가 제공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도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 경우 개별 청년들의 지역선택에 관한 의사결정(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은 서로 일정한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청년층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매력적인 일자리 질 조합을 구성·제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당면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존재하는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칭 또는 구인-구직 불균형 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임금 등 경제적인 요인들은 국가나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방 정주유인 및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보상할만한’ 수준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의 비경제적인 환경들을 개선해나가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정부들 역시 지역 내 일자리의 열악한 임금수준이나 근로 여건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활여건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및 안전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마련해 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지역 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공간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주환경 및 정주체계를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 연구들(남기찬 외, 2020)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

## 참고문헌

-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고영우·임슬기·한이철(2020).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5 -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권상철(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 571~584.
- 김기승·정민수·윤용준(2012).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현상과 정책과제』. 한국은행부산본부.
- 김리영·양광식(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 1~20.
- 김용현(2012). 「지역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성과 관리부터」. 『대경 CEO Briefing』 336.
- 김현아(2008).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2) : 75~103.
- 남기찬·김경민·조성철·홍사흠·안종욱(2020).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류장수(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 1~23.
- 문남철(2019). 「지역고용시장의 변화와 지역 간 노동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4) : 449~462.
- 박종훈·이경재(2018). 「지역별 노동시장 산업구조분석을 통한 청년층 고용전략에 관한 연구」. 『2018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pp.425~452.

- 박추환·김명수(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22 (2) : 97~113.
- 유경문(1991).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경우(1966~1985)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39 (1) : 157~209.
- 윤윤규·배기준·윤미래·이상호·최효미·김준영·신인철·정준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방법론, 설정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윤윤규·최형재(2020).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18). 「청년층 일자리정책과 지역」.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3~4.
- 이상욱·권철우·임영주(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7 (1) : 43~66.
- 이상호(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26 (1) : 45~70.
- 이성우(2001).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계속이동과 회귀이동」.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 (3) : 19~43.
- 이찬영(2015). 「The Effect of Local Labor Demand on Employment Location of College Graduates from Non-capital Regions in Korea」. 『경제연구』 33 (3) : 107~130.
- 이찬영·문제철(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 (6) : 2239~2266.
- 이찬영·이홍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 (4) : 143~169.
- 이현재(2014). 「우리나라의 권역별 기대소득 격차와 노동인구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지역연구』 30 (1) : 63~80.
- 조동훈(2020).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노동경제논집』 43 (3) : 123~145.
- 최광성·강동우·최충(2018).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1 (2) : 61~88.
- 최석현·이병호·박정훈(2016).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경

기연구원.

최성호·이창무(2013).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19 (2) : 87~102.

한국고용정보원(2020).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성」. 『고용조사브리프』.

홍성우(2016). 「광주지역 대졸인력 유출현황과 요인분석」. 『지역개발연구』 48 (1) : 1~23.

홍성호·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연구』 13 (1) : 1~19.

Anderson, J. E.(2011). “The Gravity Model”. *Annual Review of Economics* 3 (1) : 133~160.

Greenwood, M. J.(1997).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1 (B) : 647~720.

Harris, J. R. and M. P. Todaro(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 A Two-sector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 : 126~142.

Hicks, J. R.(1932). *The Theory of Wages*. London : Macmillan.

Nakosteen, R. A. and M. Zimmer(1980). “Migration and Income : The Question of Self-selec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46 (3) : 840~851.

Schwartz, A.(1973). “Interpreting the Effect of Distance o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5) : 1153~1169.

Sjaastad, L. A.(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5, Part 2) : 80~93.

Stewart, J. Q.(1950). “The Development of Social Physics”. *American Journal of Physics* 18 (5) : 239~253.

Abstract

---

The Effects of Soci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on the  
Regional Migration of College Graduates

Choi, Hyung-Jai

This stud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of population mobility that usually focused on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examines how non-economic factors, including variou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ffect the college graduates' decision to migrate out from the region where their colleges are located. For empirical analysis, data are drawn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merged with various regional statistics that are provided by national statistical portal, KOSIS. The samples for the analysis are those who graduated between 2007 and 2017. The result shows that slightly more than half of the college graduates leave the location of the college where they studied. Furthermore, for college graduates, not only economic and labor market factors but social and cultural surroundings, including education, transportation, safety, public health, living environments a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leaving the region in which their colleges are located. These results imply that appropriate policy measures are called for in order to reduce both the economic and the social or cultural capital gaps that exist among regions, in particular betwee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s and the remaining regions, so that local job mismatches or demand-supply imbalance in the regional labor markets are lessened.

Keywords : regional migration,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social and cultural capital, human capital investment